

4. 김정일 시대 개막과 남북 관계 전망

- (개요) 국가주석제 폐지 및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재추대로 권력 승계 마무리
 - 국가 운영 체제의 정상화 및 현 김정일 체제의 안정성을 대내외 과시 효과
- (특징) 국방위원장의 권한 강화 및 내각제 유사 구조의 권력 구조 개편
 - 권력 구조를 국방위원회(국방 담당),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(대외 담당), 내각(대내 담당)의 3개 축으로 단순화시킴
 - 형식상은 권력 분립을 통한 집단지도체제이나, 김정일이 당 총비서와 국방위원장을 겸임하는 국가 수반이므로 실제적으로는 수령의 유일지도체제를 유지
- (대내외 정책 전망)
 - (대내적) 군사 우선의 '強盛大國' 건설과 함께 부분적인 경제 개혁을 통한 시장경제체제 도입 확대, 시장 개방의 지역과 범위 확대에 주력할 것임
 - (대외적) 북미 관계 개선에 주력하는 한편, 중·러와도 우호 관계 유지
- (남북관계 전망) 종래의 대남 양면정책을 유지하되 민간 차원의 경험은 확대
 - 정치·군사적으로는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도, 경제 분야에서는 실리 추구를 위한 민간 차원의 경험을 확대해 나갈 것임

□ 제10기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 결과

- (의미)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됨으로써 권력 승계의 마무리 및 명실상부한 김정일 시대의 공식 개막을 공표
 - 김일성 사망 이후의 과도기적 국가 운영 체제를 정상화하고 현재의 김정일 체제의 안정성을 대내외 과시하는 의미가 있음
 - 주요 의안은 헌법 개정,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추대, 국가지도기관의 선출 등임
 - 권력 구조는 국방위원장(국방),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(김영남, 명목적인 국가 수반, 외교), 내각 총리(홍성남, 정부 대표, 경제) 順의 3각 체제로 단순화
- (특징) 국가주석제 폐지와 내각제 유사 형태로의 권력 구조 개편
 - 국가주석제 폐지 및 국방위원장의 권한 강화로 김정일이 사실상 국가 수반임
 - 종래의 정무원을 내각으로 개편하고, 중앙인민위원회가 갖고 있던 정책 집행 관련 기능과 권한을 내각으로 이관하여 내각의 기능과 권한을 대폭 강화함
 - 형식상은 국가 권력 분립을 통한 집단지도체제이나, 당(총비서 김정일)이 국가를 지도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수령(김정일)의 유일지도체제가 유지되고 있음

□ 북한의 대내 정책 전망

- 군사 우위·군부 중심에 기초한 '強盛大國' 건설로 군사화노선이 강화될 전망
 - 김정일이 주석제를 폐지하고 국가 최고 권력 자리인 국방위원장에 취임한 것은 향후 당 사업과 국방 사업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
 - 북한의 '強盛大國' 건설 강조는 사상의 강국, 정치·군사 강국 건설을 의미함
 - 따라서 군사 우위 및 군사 중시 정책에 기초한 군사화 노선이 더욱 강화될 것이며, '경제-국방 병진'에서 '국방-경제의 병진' 및 '先軍 後經'으로 변화될 전망
 - 군 우위와 한정된 자원배분으로 민수부문의 자원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될 우려
- 부분적인 시장경제체제(사유화 인정) 도입 및 제한적인 시장 개방 확대 전망
 - 홍성남, 김영남을 비롯, 경제·외교분야의 실무형 전문 기술관료들이 전면 부상
 - 개정 헌법에서 '텃밭 경리를 포함한 개인 부업 경리'를 인정한 데 이어, '그밖의 합법적인 경리 활동'을 추가 인정했고(제24조), '거주·여행의 자유'를 신설함. 이는 사적 소유 및 거래의 확대 허용과 인센티브제의 도입을 의미하는 것으로
 - 또한 '대외 무역을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가 담당'(제36조)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대외 무역 주체를 다원화하고 협동단체의 대외 교섭권과 자율성을 강화함
 - '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 가지 기업 창설 운영을 장려'(제37조)한다고 규정하여 남포·원산 지역의 보세가공무역지대 및 금강산 지역의 관광 특구 지정 등 개방 지역과 범위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
 - 이런 변화는 자력갱생의 한계를 인식하고, 시장 개방 확대, 무역제일주의, 수출산업 및 관광사업 육성을 통한 외자 유치와 외화벌이에 더욱 주력하겠다는 의도임
 - 그러나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체제 불안과 사회 동요를 우려하여 주민에 대한 조직적·사상적 통제는 계속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

□ 북한의 대외 정책 전망

- 경제난 극복과 체제 생존을 위해 북미·북일 관계 개선에 주력하는 한편, 중국과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 유지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임
 - (북미·북일 관계) 국방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것이나, 경제적 측면에서는 대서방 자본 유치와 북일 청구권(약 50~100억) 협상 재개

- 를 위해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한 대북 경제 제재 완화에 주력할 것임
- 4자 회담에서는 북미 평화 협정과 주한 미군 철수 등을 주요 협상 수단으로 삼을 것이며, 미사일 협상에서는 경제적 반대 급부를 계속 요구할 것임
 - 최근의 로켓 발사 사건으로 북일간 냉각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므로 북한은 일본보다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더욱 주력할 것임
 - (대중·대러시아 관계) 전통적인 우호·친선 관계 유지 및 회복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

□ 남북 관계 및 경험 전망

- (남북 관계) 남한 당국자 배제 원칙 하에 정치·군사적 측면에서는 당분간 대결과 긴장 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다
 - 우리 정부의 햇볕정책이 정치 사상적으로 북한 체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어, 남북 관계 개선 노력에는 종전의 소극적인 태도가 유지될 것임
 - 이는 8.15 경축사에서 밝힌 김대통령의 대북 제의에 대해 북한이 5개항의 부정적 반응을 보인 점에서도 입증되었음
 - 그러나 민간 경험 중심의 남북 경험이 확대됨에 따라, 북한은 대남 침투 도발 행위의 빈도와 강도를 약화시키는 등 대결적 자세가 점차 완화될 수도 있음
 - 만약 남북 관계가 개선되어 남북 정상 회담이 성사될 경우, 북측 상대자는 '정부 대표'인 내각 총리(홍성남)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, 당국자 회담은 정상 회담보다는 총리 회담, 특사 교환, 각료급 회담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임
- (남북 경험) 실리에 바탕을 둔 민간 차원의 남북 경험은 확대될 것임
 - 체제 유지와 심각한 경제난의 핵심인 외화난 해결을 위해서는 대규모 외자 유치 불가피함. 그러나 이는 정치적 불안정성 제거와 SOC 등의 기반 시설 개선은 물론, 남북 경험 확대를 통한 한반도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함
 - 따라서 북한은 실리주의 접근 자세에서 민간 차원의 남북 경험은 확대할 것임
 - 단기적으로는 외화 가득 사업과 경공업, 농업 부문 중심의 경험이 유력함
 - 예컨대, 관광 사업, 유희설비 도입을 통한 생필품 생산, 농장 개발과 영농 합작을 통한 식량 증산 사업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임

(홍 순 직 sjhong@hri.co.kr ☎724-4051, 이 태 섭 tslee@hri.co.kr ☎724-4052)